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강압수사’ 공방

광주고법, 재심 재판 진행
수사 관계자 3명 증인 출석
변호인, 강압조사 문제 제기
다음 재판 7월 1일 오후 예정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재판이 속행되며 강압수사 여부를 놓고 피고인 측과 당시 수사 관계자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5)씨와 그의 딸

(41)에 대한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사건 수사 관계자였던 경찰관 A씨와 B씨, 여성 검찰 수사관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수사 당시 검사였던 D씨는 여전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순천경찰서 경찰관 A씨는 당시 수사 지원팀에서 사건 관련 조서를 작성한 인물로, 이번 재심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부녀 간 성폭행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마을 팀 소속이었고 사건 전담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증언했

다.

전남경찰청 소속 B씨는 당시 사건 인지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2009년 사건 당시 검사실에서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여성 검찰 수사관 C씨의 유도신문성 ‘강압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진술 녹화 영상과 관련 기록을 제시하며 백씨의 딸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C씨는 “당시 조사가 거칠었

을 수는 있으나, 부녀 간 관계 사실을 확인

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백씨 부녀의 소극적이고 어눌한 진술에 비해 조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막걸리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과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의 용량이 다른 점 △청산가리의 입수 시기·경위와 당시 감정 결과의 불명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백씨 부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열릴 예정이고, 숨진 피해자의 여동생(딸 백씨의 이모) 등 가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라남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피고인들은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 재심을 받게 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12·29제주항공 참사 유가족,李 대통령에 면담 요청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등 요구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 일동은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단체는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국내 항공기 참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혀지고 있다”며 “179명 희생자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달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항공기 결함’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제주항공이 동일 기종을 39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사고 기체의 정비 이력이 공개돼야 하며, 무리한 스케줄 편성으로 인한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껏 버텼지만, 탄핵 등에 가려져 잊혀져 가고 있다”며 “참사 4달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진상규명이 빠져 반갑지 않다. 우리 유가족은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공항을 떠나지 못한다. 면담을 정식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교육청 “리박스쿨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없다”

조사 결과 정치편향 교육 무관
강사 1명, 리박스쿨 자격증 소지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의혹과 관련해 관내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육청은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2일 오전, 관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 강화’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강사 대상 정치적 편향 교육 금지 연수와 모니터링·신고 체계를 안내했다. 이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파견한 강사가 프로그

램을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만, 늘봄학교에 참여한 개인 강사 2510명 중 1명이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강사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리박스쿨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정치적 편향 교육이나 관련 민원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2차 공동 조사를 통해 강사 활동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가 확인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적 편향 교육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철 기자

전남교육청, 도서학교 찾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10일 진도군 조도면 소재 조도중·고등학교, 조도초등학교, 조도초거차분교장을 찾아 도서지역 교육현장을 점검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중교통, 학교방문’ 정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도중·고는 생태담방, 예술체험, 진로탐색 등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자율 동아리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실 현대화, 행정선지원 확대, 교원 정원 확보, 스마트교실 구축, 관사 환경 개선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조도초는 AI·SW교육과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과 문해력, 표현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 기념탑 제막식, 공연 등이 진행됐다.

조도초거차분교장은 현재 학생 1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학교로, 정서적 안정과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유철 기자



서구, ‘치매 전담책임제’ 도입·운영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서구청 치매관리 전담책임제 운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뇌물 받고 업체 도운 광주 공공기관 간부 구속

4400만원 수수… 공모 선정 개입

공공기관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광주지역 공공기관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IT업체 대표 B씨가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구성 등에 개입하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의 업체는 6차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유령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2019

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이나 지인을 연구원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실제로는 자금을 회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권익위 이첩 후 신속한 압수색으로 비리를 전모 규명했다”며 “국가재정 낭비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한눈에 찾아보세요”… 동구, 빈집마켓 플랫폼

철거방식 벗어나 활용촉진 목적
수리비 및 반값 임대료 등 지원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늘어나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한다.

광주 동구는 ‘빈집마켓’ 플랫폼을 오는 7월부터 누리집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

제를 야기함에 따라 철거에 집중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플랫폼에서는 빈집 정보 검색, 임대 등록 신청,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빈집마켓을 통해 빈집 소유자가 주택을 정비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의 ‘빈집 수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이 개선된 빈집의 임대

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임대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택 동구청장은 “빈집마켓 운영 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